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9월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경제-1> 공공부분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이양, 후속조치 현황

김영훈 실장·이수영 팀장

정부는 지난 2015년9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1]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10월부터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이양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차기정부인 2018년 이후에 진행예정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 차기정부에게 넘긴, 현 정부의 민간이양사업 추진

행정자치부는 2015년10월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제출한 민간이양 세부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 내 이양계획이 완료·확정된 것은 7건(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오동골프클럽연습장(사업주체: 강북구도시관리공단)과 북악골프연습장(사업주체: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2021년 매각예정으로, 이양추진에 최장시간을 계획하고 있었다.

【표 1】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시행시기

매각계획연도	사업수	전체대비 비율
2016년 이전	7개	30%
2018년 이후	13개	57%
2020년 이후	3개	13%
합계	**23개**	**100%**

: (참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예정)일 2017년 12월20일

【표 1】에서 볼 수 있듯, 2018년 이후로 민간이양이 미뤄진 사업이 전체 70%에 해당한다. 차기정부로 이행시기를 늦추게 되는 경우, 주민의견수렴·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치며 민간이양이

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골프장·목욕탕 등 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2015.9.24발표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의 매각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자체가 제출한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2개의 골프장 사업은 민간이양에 대한 대략적인 사전검토만 있을 뿐, 민간이양 검토방향과 추진일정 내용이 겹치는 등 지자체의 매각의지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 장기적인 민간이양 추진 사례

□ **상무골프연습장** (사업주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업유형	자체사업	**이행시기**	장기(2018년)
민간이양시 문제점 사전검토	**- 공공체육시설 적자보전 불가** · 상무골프연습장 운영 수익금으로 공공체육시설(염주실내수영장 · 빙상장 등)의 적자를 보전하였으나 민간이양 시 보전 불가 ※ 상무골프장 → 市 위탁 염주 실내수영장, 빙상장 적자액 보전 5~8억원		
민간이양 검토방향	민간 이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 모색		
추진일정	○ 관련기관 협의(광주광역시 등) : 2016년 ○ 외부전문가 자문, 전문기관 용역 등 : 2016 ~ 2017년 ○ 활용방안 확정 : 2018년 ○ 활용방안 시행 : 2018년부터		

□ **빛고을CC** (사업주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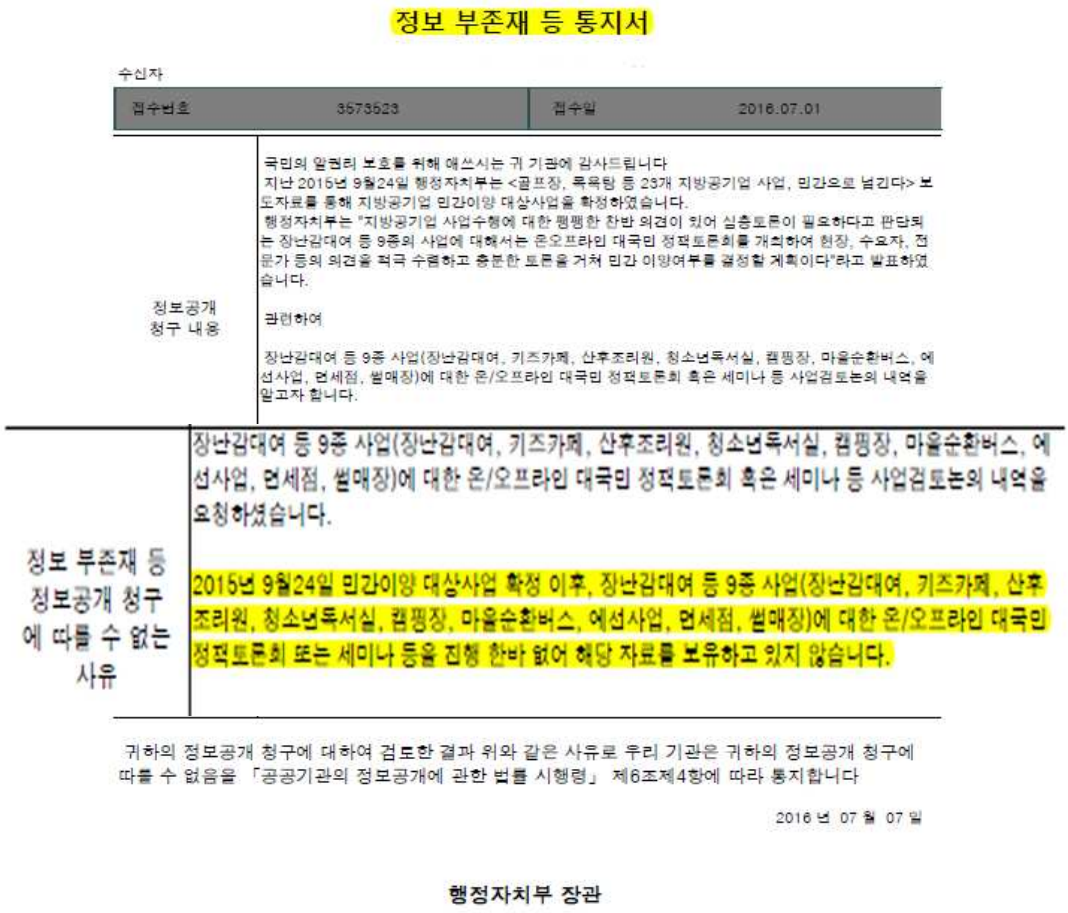
사업유형	자체사업	**이행시기**	장기(2018년)
민간이양시 문제점 사전검토	**- 공공체육시설 적자보전 불가** · 빛고을CC 민간이양 시 빛고을 노인복지타운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추가재정 투입 필요 ※ 그간 지원 내역 : 2010년 이후 5년동안 2,221백만원 지원 **- 수익사업 위주의 무분별한 민간 개발 우려** ·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수익사업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과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등 우려 ※ 동 사업지구 그린벨트 해제(2005년, 노인복지시설 설치)		
민간이양 검토방향	민간 이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 모색		
추진일정	○ 관련기관 협의(광주광역시 등) : 2016년 ○ 외부전문가 자문, 전문기관 용역 등 : 2016 ~ 2017년 ○ 활용방안 확정 : 2018년 ○ 활용방안 시행 : 2018년부터		

2. 심층토론 필요하다던 9개 사업, 심층논의한 적 없어

정부는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어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양에 관한 심층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2] 그러나 확인결과,[3] 정부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①장난감대여, ②키즈카페, ③산후조리원, ④청소년독서실, ⑤캠핑장, ⑥마을순환버스, ⑦예선사업, ⑧면세점, ⑨썰매장

【그림 1】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접수번호	3573523	접수일	2016.07.01

정보공개 청구 내용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5년 9월24일 행정자치부는 <골프장, 목욕탕 등 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사업수행에 대한 팽팽한 찬반 의견이 있어 심층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난감대여 등 9종의 사업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수요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민간 이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장난감대여 등 9종 사업(장난감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핑장, 마을순환버스, 예선사업, 면세점, 썰매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 혹은 세미나 등 사업검토논의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장난감대여 등 9종 사업(장난감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핑장, 마을순환버스, 예선사업, 면세점, 썰매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 혹은 세미나 등 사업검토논의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2015년 9월24일 민간이양 대상사업 확정 이후, 장난감대여 등 9종 사업(장난감대여,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청소년독서실, 캠핑장, 마을순환버스, 예선사업, 면세점, 썰매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 또는 세미나 등을 진행 한바 없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16 년 07 월 07 일

행정자치부 장관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와는 달리, '충분한 검토논의의 장 마련'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약속한 후속조치들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2) "온/오프라인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수요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민간 이양여부를 결정할 계획";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골프장·목욕탕 등 23개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으로 넘긴다', 2015.9.24발표
3)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공기업과-2640, 2016.7.7.)

3. 이미 매각공고 중인 사업도 포함?

정부발표 이전 이미 민간이양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도 당시 민간이양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개발공사의 3개 호텔사업은 정부의 민간이양 발표 전 이미 매각 시도가 불발된바 있다. 송도 브릿지호텔의 경우도 2011년 이미 매물로 나와 2015년9월 매매협약서를 체결한 상황이었다.(**【표 2】** 참조).

【표 2】 매각시도

사업	1차 매각	2차 매각	지방공기업 민간이양사업 발표일
한옥호텔 오동재	'15.8.10~9.7(유찰)	'15.9.21~10.19(유찰)	2015.9.24
한옥호텔 영신재	'15.8.10~9.7(유찰)	'15.9.21~10.19(유찰)	
해남땅끝호텔	'15.7.9~8.6(유찰)	'15.8.13~27(유찰)	
송도브릿지호텔	15.9(매매협약서 체결)		

4. 지방공기업 사업, 시행단계부터 민간과의 경합 고려해야

한번 시작된 지방공기업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 사업성 미비에 따른 매각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법」[4]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민간부분과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확장된 사업내용에 따라, 민간과의 경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신속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지방공기업 일부사업의 민간이양계획은,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행정부 업무방향에 정권별 국정운영 기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사업구조조정 정책에도 시간적 한계를 갖는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유야무야되는 일이 없도록, 기발표된 정책의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과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 만큼, 중앙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골프장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4)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1】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

구 분	민간이양 사업	소관 지방공기업
온 천	안동학가산온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목욕탕	신길목욕탕	안산시도시공사
골프장	빛고을CC	광주도시공사
	전주월드컵골프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골프연습장	오동골프클럽연습장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북악골프연습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안산골프연습장	안산도시공사
	상무골프연습장	광주도시공사
래프팅장	한탄강 수상레저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서바이벌체험장	전주밀리터리서바이벌체험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호 텔	송도브릿지호텔	인천도시공사
	한옥호텔 오동재	전남개발공사
	한옥호텔 영산재	전남개발공사
	해남땅끝호텔	전남개발공사
편의점	편의점	부산관광공사
휴게소	전주시동물원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구내식당	보훈회관 구내식당	화성도시공사
	기장군청 구내식당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주류사업	제주맥주사업	제주개발공사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잔디양묘	잔디양묘	창녕군개발공사
식음료케이터링	케이터링 뷔페	부산관광공사
마주사업	마주(馬主)사업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확정 보도자료(2015.9.24.)